

經濟性 重視와 市場 競爭導入의 石油政策

金 乾 治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石油을 全量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石油정책의 方向 역시 업계와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石油의 의존도 감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原子力, 유연탄 등 石油代替에너지 사용의 확대등과 같은 이른바 「脫石油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石油은 우리나라 총에너지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主宗에너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세계각국의 工業化의 진전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石油에 代替할 경제성 있는 新에너지가 개발·활용되기까지는 石油이 계속 主宗에너지로서 굳건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존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石油문제가 여전히 에너지정책의 中核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국제석유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石油정책도 조심스러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래 에너지정책의 체계가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을 이룩하려는 경제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변전무쌍한 국내외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방향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石油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와 원유도입의 경제성 重視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석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은 최근 韓國動力資源研究所 주최의 국제석유세미나에서 『정부는 종래의 物量 확보만을 위주로 했던 석유도입정책에서 탈피, 앞으로는 石油의 가격·質은 물론 유리한 계약조건까지도 고려한 經濟性 위주의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석유확보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20% 범위내의 現物도입을 고집하던 정부로서는 중대한 정책전환이 아닐 수 없다.

또 앞으로 石油정책의 전개과정에서는 정부와 기

업의 기능을 적절히 분담, 정부는 경제정책의 운영 기조와 종합에너지정책을 토대로 석유비축, 석유개발 등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주력하는 한편 석유의 가격과 수급관리도 점진적으로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율과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국민경제의 확대와 개방체제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종래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의 에너지정책은 기업의 창의적 경영과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석유가격 구조를 왜곡시켰으며, 조정시기의 지연으로 조정요인이 누적됨으로써 충격이 상승작용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

현행 국내석유류가격은 정부가 결정하여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으로 告示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수출입과 주요설비의 신증설도 정부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석유류가격결정 및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精油社의 低價원유도입과 경영합리화노력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석유정세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精油産業은 외국 석유산업에 뒤지지 않는 적응력을 가지고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여 왔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가격결정을 포함한 석유정책의 수립과 생산·유통체제에 있어 행정적인 관여에 의해 市場메커니즘을 왜곡시킨 지난 날의 석유정책을 수정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타당하고 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産業이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산업의 발전은 올바른 산업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때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우리나라 經濟나 台灣, 그리고 日本의 경제발전모형에서도 알 수 있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시장기능을 보완하여 보다 바람직한 산업구조와 산업조직을 실현시킴으로써 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石油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원유도입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석유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라는 정책방향이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

부시책에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에너지政策의 골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안정 확보
- 2) 石油代替를 통한 에너지수급구조의 개편(脫石油정책)
- 3) 국내부존자원의 적극 개발
- 4)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의 추진

이와 같은 과제별 주요시책을 요약하면 다음 表와 같다.

제 5 차 5 개년 政策 課題別 主要施策

課 題	主 要 施 策
에너지資源의 안정供給	1) 石油의 安定 확보 2) 石油 및 石炭비축事業의 지속적추진 3) 油田開發의 적극 추진 4) 海外資源開發의 촉진
石油代替의 적극추진	1) 原子力, 石炭중심의 電源개발 2) 가스普及基盤 조성 3) 代替에너지의 개발보급촉진
國內賦存資源의 적극개발	1) 石炭증산 추진 2) 水力資源의 최대 개발 3) 一般鑛의 개발촉진 4) 大陸棚 개발의 본격화
에너지절약 및 合理的 이용	1) 에너지 저소비형 産業構造化 2) 에너지利用效率 제고 3) 소비절약의 강력추진 4) 弘報 및 제몽

제 1 차 석유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공급제약의 극복이 최대의 과제였다. 이 시기의 큰 특징은 공급만 확보할 수 있다면 코스트와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 공급우선주의가 팽배하기도 했다. OPEC의 장기석유가격전락이 발표되면서 油價는 무한히 상승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假說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제 2 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석유시장에 냉엄한 市場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자 상황은 일변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같은 공급우선주의는 퇴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국내부존에너지자원이 빈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에너지공급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經濟性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한, 우리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안정공급의 확보와 經濟性의 조화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의 실제담당자는 「에너지産業」, 그 자체라는 점이다. 정책수립과 집행은 정부만이 하고 산업은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만이 政策은 아니다.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가 추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동시에 에너지産業 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며, 또한 에너지産業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에너지政策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민간기업의 창의와 능률, 그리고 活力을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市場원리라고 하는 거대한 힘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간다고 한다면, 그 기본적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에너지산업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의 자율적 책임경영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나 제도등에 의한 규제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전반적인 민간주도경제운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기능에 보다 철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에너지政策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國際化」라는 점이다. 에너지는 국제적인 감각이

강한 상품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부존에너지자원이 빈약한 나라는 에너지의 안정공급확보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의 제고라는 면에서도 국제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政策은 국제적인 감각과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에너지政策의 담당자인 정부와 에너지산업이 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국제화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른 바 「脫石油政策」의 의미에 대한 재음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石油정책의 기초는 石油가 유한자원이며, 또 앞으로 석유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국에서 취해 온 공통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석유시장이 수급과 가격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안정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와 같은 경직적인 「脫石油政策」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현재라는 時點에서 과거의 에너지에 관한 예측이나 전망을 돌이켜 보면,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石油에 관한 한, 가장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말은 不確實하다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말까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에너지政策은 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거듭해 갈 것이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정책방향을 신속성 있고 현실성있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

부담되는 연말선물 얼룩지는 송구영신